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
- 현장소통·의견수렴 병행,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8.(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속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526)
		담당자	사무관	정누리 (044-202-7555)

1 개요

- 일시: '24. 11. 8.(금), 08:00~09:00
- 장소: SWITCH22(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2 22층)
- 주요 참석자

▲ (고용부)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장

▲ (연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위원(가나다순)

연번	성명	소속	연번	성명	소속
1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2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3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	4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5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6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	8	전인	영남대 경영학
9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			

2 세부 계획(안) ※ 모두발언, 사진촬영까지 공개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08:00~08:05('5)	■ 모두발언, 사진촬영	장관
08:05~08:55('50)	■ 기초발제, 안건 논의	
08:55~09:00('5)	■ 마무리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 현장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자리해주신 전·현직 공익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째입니다.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1988년 462.5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은
2025년 10,030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결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7년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